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홍 석 룰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9년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을
둘러싼 한국 정부와 전대협의 협상

2023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정 선 화

1989년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을
둘러싼 한국 정부와 전대협의 협상

홍 석 룰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정 선 화

인 준 서

정선화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강 호 선 _____



심사위원 _____ 정 진 현 _____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정진현' (Jung Jin-hyun).

심사위원 _____ 홍 석 룰 _____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개요

이 논문은 19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둘러싼 한국 정부와 전대협이 협상을 분석한다. 1989년 여름 임수경의 방북은 당시 한국 사회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평양축전 참가 문제에 대한 정부의 극단적 탄압과 학생들과의 대치 그리고 임수경의 방북으로 귀결되는 일련의 과정은 사실 필연적인 것은 아니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1989년 평양축전 참가를 둘러싼 정부와 전대협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이전에도 대학생들의 남북 학생교류에 대한 제의가 있었으나 진보적 학생 통일운동 세력과 정부가 공식적으로 협상을 한 것은 처음이었고,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평양축전을 둘러싼 정부와 전대협의 협상은 6월항쟁 이후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이 사건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의 성격을 규명하는 하나의 사례로서, 과연 노태우 정부가 얼마만큼 남북한 민간교류 추진에 대해 이행 의지와 정치적·이념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평가해볼 수 있다. 두 번째로, 4월혁명 직후 학생 통일운동이 본격화된 이래 극단적 대치 관계에 놓여있었던 정부와 진보적 학생 통일운동 세력 간 협력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평양축전을 남북한 체제경쟁적 차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개최한 이례적인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이것이 북한 주민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보고자 한다.

정부와 전대협의 협상은 새로운 차원의 역사적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었다. 만약 협상이 성사되어 임수경 대표 한 명이 아닌 수백 명 규모의 학생대표단이 평양축전에 참가했다면 한반도를 넘어 국제 정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비록 정부와 전대협 사이 협상은 결렬되었으나 그 시도 자체만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오늘날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 상태이며 남북한 관계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통일에 대한 열망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1989년 당시 정부와 전대협의 협상은 남북한 민간교류와 남남대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중요한 초석이 된다.

목 차

논문개요

머리말	1
I. 평양축전 개최에 대한 한국 정부와 전대협의 대응	9
1. 북한의 평양축전 유치와 전대협 초청	9
2. 민주화 이후 대학생 통일운동의 전개와 평양축전 참가 문제	12
3. 축전 참가에 대한 정부의 초기 반응	17
II. 한국 정부와 전대협의 축전 참가 협상 시도와 결렬	22
1. 남북학생교류추진위원회 발족과 대화 시도	22
2. 공안정국과 협상의 정체	26
3. 정부의 축전 참가 불허 방침	40
맺음말	45

참고문헌

ABSTRACT

머리말

1989년 여름 임수경의 방북은 당시 한국 사회에 많은 논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전대협 대표 임수경은 1989년 7월 1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하 평양축전)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 서베를린, 동베를린, 모스크바를 거쳐 마침내 1989년 6월 30일 평양에 도착했고 45일간의 방북을 마치고 판문점으로 귀환했다.

임수경의 방북에 대해서 평가가 분분하지만¹⁾, 이는 남북한 모두에 사회적 파장을 미치고 여러 변화도 불러일으켰다. 민주화 이후 대학생들의 남북한 학생교류에 대한 의지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강렬하게 드러낸 사건이며, 이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가 산하 조직으로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이하 조통위)를 창설함으로써 학생운동의 의제로서 통일이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다. 평양축전 당시 북한 주민들은 임수경에 대해 열광적인 반응을 보인 동시에 매우 큰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이는 당시 대학생이었던 탈북민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남아있다.²⁾

임수경의 방북은 통일 문제와 남북관계에 일보 진전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한국 사회에는 후유증을 남겼다. 학생운동권 내에서도 임수경의 방북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존재했으며,³⁾ 노태우 정부는 이를 이적행위로 간주하고 임수경에

1) 임수경과 문규현 신부의 방북에 대하여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전국가톨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가톨릭농민회 등 가톨릭 16개 사회단체는 “문익환 목사나 임수경씨의 평양방문은 분단을 해소하려는 민족적 염원을 해소하기 위한 커다란 발걸음”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이를 지지하는 의견을 밝혔다. 「문신부 북한파견 지지」, 『한겨레』, 1989.07.29.; 반면 임수경의 방북에 대하여 김영삼 민주당 총재는 “서경원의원 및 문익환목사 임수경양 문규현신부 등의 방북과 같은 소영웅주의적행동은 결코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아니라 북한만을 이롭게 하므로 단호히 배격한다”고 말했다. 「개별訪北 단호히 배격」, 『경향신문』, 1989.08.01.

2) “임수경 학생의 여유롭고 거침없는 언변과 자유로운 옷차림 등은 오히려 북한대학생들에게 한국 사회의 열린 교육 실태와 발전상, 북한보다 앞선 문명사회라는 것을 파악하고 인식을 바로 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 전체가 임수경 학생에 열광했다.”

조원일, 「눈물로 쓴 탈북민 手記 노동자 대학」, 『北韓』, 북한연구소, 2012, 173쪽

3) 당시 PD(민중민주)계 학생운동 일각에서는 “평축투쟁이 반정부투쟁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각

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형을 선고했다. 임수경과 문익환 등의 방북 이후 정부는 공안정국을 강화하였고, 이후 1990년 1월 22일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을 통해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탄생하며 민주화 이행을 제약하였다.

당시 평양축전 참가 문제에 대한 정부의 극단적 탄압과 학생들과의 대치 그리고 임수경의 방북으로 귀결되는 일련의 과정은 사실 필연적인 것은 아니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와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가 있었는데, 바로 1989년에 평양축전 참가를 둘러싸고 정부와 전대협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전에도 대학생들의 남북 학생교류에 대한 제의가 있었지만, 진보적 학생 통일운동 세력과 정부가 공식적으로 협상을 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례적으로 있었던 정부와 전대협으로 대표되는 진보적 학생 통일운동 집단의 대화와 협상을 남남대화의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남남대화는 남남갈등과 상호 보충적인 관계에 있는 개념이다. 남남갈등이란 대북정책, 남북관계, 통일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사회 내부의 다양한 주체들 간에 전개되는 이견과 대립을 의미한다.⁴⁾ 남남갈등은 분단과 함께 시작되어 시기에 따라 그 주체와 양상을 달리한다. 노태우 정권기에는 일련의 방북 사건으로부터 국가와 진보적 시민사회 사이의 갈등이 형성되었으나⁵⁾, 한편으로 평양축전 참가에 관한 정부와 전대협 사이의 협상이라는 남남대화 또한 진행되었다.

평양축전 참가를 둘러싸고 진행된 정부와 전대협의 협상은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 번째로 이 사건은 노

중 사업장에서의 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을 벌였어야 할 시점을 놓치게 만들었다”며 평북투쟁의 지도부에 대해 ‘소영웅적모험주의’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대학運動圈 변하고 있다 中 全大協의 잇단 自充手」, 『경향신문』, 1989.11.02.

4) 이윤식, 「글로벌시대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대북정책과 남남갈등을 중심으로」, 『世界地域研究論叢』 35집 3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17, 313쪽

5) 손호철, 「남남갈등의 기원과 전개과정」,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28쪽

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의 성격을 규명하는 하나의 사례가 된다.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수립하여 공산권과의 외교 정상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였고, 1988년 7·7선언에서 이를 구체화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를 추진할 것을 선언했다. 따라서 평양축전 참가에 대한 정부와 전대협 의 협상은 과연 노태우 정부가 얼마만큼 남북한 사이의 민간교류 추진에 대한 이행 의지와 정치적·이념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평가해볼 수 있는 사례이다.

두 번째로 남남대화 차원에서 진보적 학생 통일운동 세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를 제공한다. 정부와 진보적 학생 통일운동 세력은 4월혁명 직후 학생들의 통일운동이 본격화된 이래 극단적 대치 관계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1989년 당시 정부와 전대협 사이에 이루어진 이례적인 협상은 두 주체의 관계가 꼭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야 했던 것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당시에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로 평양축전의 의미를 재조명해볼 수 있다. 평양축전은 남북체제경쟁의 맥락에서 남한의 88 올림픽 개최에 대한 대응책이자 반제 선전을 위한 정치적 행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평양축전이 이와 같은 성격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평양축전은 아시아권 최초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이었으며 북한에 처음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이 방문한 국제적 행사였다. 또한 전대협 대표 임수경의 방북은 북한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의식에 균열을 발생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평양축전은 북한의 체제 선전을 위해 계획되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남북 학생교류를 위한 학생들의 움직임은 1960년 4월혁명을 계기로 통일논의가 민간차원으로 확산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4월혁명의 주역이었던 학생들은 통일논의를 고양시키고 이를 사회세력화된 통일운동으로 분출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⁶⁾ 학생들의 통일운동은 1960년 11월 1일 서울

대학교 학생들이 '민족통일연맹'(이하 민통련)을 발기하고 뒤이어 학교별로 민통련이 결성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민통련은 학생운동을 반독재 민주화운동이나 시민계몽운동의 차원이 아닌 남한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분단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했다.⁷⁾ 1961년 5월 4일 서울대학교 민통련이 공식적으로 남북 학생회담을 제안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는 학생들의 첫 남북 학생교류 제안으로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서울대 민통련의 남북 학생회담 제의로부터 26년이 흐른 뒤, 1987년 한국은 6월항쟁을 통해 민주화 이행에 접어들었고 4월혁명 직후와 마찬가지로 통일운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1988년 3월 서울대학교 학생회장 후보였던 김중기와 유재석이 유세 도중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에게 드리는 공개서한'을 발표하며 남북 학생회담 개최를 제안하여 파장을 일으켰다. 두 후보는 서한을 통해 남북 학생회담 개최를 제안하였으나, 결국 이는 성사되지 못했다.

1988년 진보적 학생운동계열의 남북 학생회담 개최 제안이 좌절된 이후, 학생 통일운동의 흐름은 1989년 7월 북한에서 개최될 평양축전에 참가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평양축전의 개최 소식이 알려진 이후, 정부는 축전 문제를 다루기 위해 '남북학생교류추진위원회(이하 교류추진위)'를 조직하여 전대협 산하 조직인 축전준비위원회를 주축으로 하는 대학생들과 축전 참가를 위한 협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정부가 축전 개최 직전인 6월 21일 최종적으로 축전 참가를 전면 불허함으로써 협상이 결렬되고, 임수경이 전대협 대표로서 단독 방북했다. 만약 정부와 전대협 사이의 협상이 성사되어 임수경 한 명이 아닌 수십, 수백 명의 학생이 평양축전에 참가했다면 그 파장은 임수경의 방북이 불러온 것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을 가졌을 것이다. 오늘날 여전히 남북한 통합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문제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실현되지 못한 역사적 가

6) 홍석률, 『통일문제와 정치·사회적 갈등 : 1953~1961』,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137쪽

7) 홍석률, 위의 책, 2003, 138쪽

능성에 대해 주목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평양축전의 참가를 둘러싼 전대협과 한국 정부 사이의 협상이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오래 지나지 않은 사건인 만큼 그에 대한 연구성과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평양축전에 관한 연구는 크게 북한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남한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있다. 평양축전과 북한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김병원과 김윤희의 연구가 존재한다. 김병원의 연구⁸⁾는 평양축전의 유치에서 개막까지의 과정이 북한의 전체주의적 대중동원체제(군중노선)의 활용 측면에서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며, 로동신문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평양축전이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체제의 선전과 유지를 위해 활용된 예를 분석하고 있다. 이는 북한사 연구로서 의미를 지니나, 남북관계사의 관점에서 축전이 남한과의 체제경쟁 측면에서 선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밝혀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김윤희의 연구⁹⁾는 탈북민들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평양축전 당시 북한 사회에 임수경이 미친 영향을 민족주의와 ‘개인’이라는 주체의 등장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개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북한 사회에서 임수경의 등장은 개인이라는 새로운 인간 유형을 인식하도록 했고, 자유분방한 임수경의 성격과 패션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당국이 주입하는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남한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로 작용하여 훗날 북한 사회 균열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시사하고 있다. 김병원과 김윤희의 연구 모두 평양축전과 임수경이 북한 내부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임수경이 방북하기까지의 과정, 특히 한국 정부와 전대협의 협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평양축전과 한국 사회 내부 문제를 연결시킨 연구로는 박해남의 박사학위 논문¹⁰⁾이 존재한다. 박해남의 연구는 국가의 사회정치 수단으로서의 88 서울올림

8) 김병원, 「평양축전을 통한 북한의 대중동원체제 활용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6집, 1990

9) 김윤희, 「북한에서 ‘임수경 열광’과 도전받은 집단주의», 『아세아연구』 65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22

픽에 관해 다루면서 한국이 1980년대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직면한 급격한 사회변동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 질서와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올림픽을 활용했다고 주장한다. 다음 해인 1989년 7월 초 북한은 평양축전을 개최하였는데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서울올림픽의 개최 이유와 유사한 것이었다. 이때 전대협은 축전 행사가 지닌 반제·반식민의 구호 아래 청년들 간의 국제적 연대와 단결의 강화를 위해 참여를 결정하였고, 정부 역시 학생들의 축전 참가에 동의를 표하며 '남북학생교류추진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었지만 1989년 3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 이후 정부가 축전 참가를 불허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고 결과적으로 임수경이 전대협 대표로서 축전에 참가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박해남의 연구는 평양축전 당시 정부와 전대협의 협상을 의미 있는 사실로서 언급은 하고 있으나 그 과정과 의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부재하다. 아울러 평양축전을 논문의 핵심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논문에서 차지하는 분량도 매우 적다.

평양축전과 관련된 학술행사로는 2017년 11월 22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개최한 「북한의 사회변동을 이해하는 하나의 인식: 13차 세계청년학생 축전 연구」 심포지움이 있다. 심포지움의 발표·토론문을 수록한 자료집¹¹⁾이 발간되었는데, 제1세션은 국제 학생연합과 평양축전의 관계, 평양축전이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 그리고 평양축전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을 1989년 당시 전대협 축전준비위원장 전문환의 경험으로 구성하여 다루고 있다. 제2세션은 평양축전이 북한 사회변동에 미친 영향, 임수경의 방북이 남북한 사회와 남북관계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두 발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평양축전이라는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 유의미한 연구이나 필자가 다루고자 하는 평양축전 참가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와 대학생의 대응, 그리고 두 주체가 협력하고

10) 박해남, 「서울올림픽과 1980년대의 사회정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8

1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심포지움 『북한의 사회변동을 이해하는 하나의 인식: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연구』 자료집, 2017

대립하는 과정은 분석되지 않았다.

당시 전대협의 평양축전 참가는 민간 통일운동과 1987년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분출된 대학생 통일운동의 맥락에서 연속성을 지니는 사건이므로 이 부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민경우의 저서¹²⁾는 1972년부터 2005년까지의 통일 정세와 통일운동사를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책의 2장에서는 1987년 6월항쟁을 계기로 확장된 대중적 통일운동의 분위기 하에서 1988년 남북 학생회담 개최 시도, 그리고 이를 계승한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의 방북이라는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민경우는 당시 남북학생교류추진위원회의 발족과 정부의 불허 방침으로 임수경이 독자 방북하게 된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는 있으나 북한의 전대협 초청과 이후 정부와 전대협 사이에 이루어진 협상의 구체적인 과정은 밝히고 있지 않다.

필자는 북한이 88 서울올림픽 유치에 큰 자극과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 대응으로서 평양축전을 개최한 것이라면 반대로 평양축전은 한국 사회 내부에 어떤 소용돌이를 일으켰을가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본 논문은 북한의 평양축전 개최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여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최에 대한 한국 정부와 대학생의 반응과 두 주체 사이의 협상, 그리고 그 협상의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1장에서는 북한이 평양축전을 유치하게 된 이유와 축전 준비과정을 먼저 규명하고, 1980년대 후반 한국 대학생들의 통일운동의 흐름과 이어지는 전대협의 축전 참가 준비의 역사적 맥락을 제시하고자 한다.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당시 노태우 정부가 학생들의 평양축전 참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정부의 주요 정책인 북방정책의 흐름에서 서술할 것이다.

2장에서는 정부와 전대협이 평양축전을 둘러싸고 진행한 협상의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정부와 전대협 사이에 축전 참가 문제를 두고 어떤 대화가 오고

12) 민경우, 『민경우가 쓴 통일운동사 — 1972-2005』, 통일뉴스, 2006

갔으며, 1989년 3월 문익환 목사와 황석영 작가의 방북 논란, 이와 더불어 5월 부산 동의대 사건과 조선대 학생 이철규 변사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형성된 공안 정국의 분위기로 결국 협상이 결렬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불허 방침을 내기까지 상황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다. 끝으로 임수경의 방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고, 정부와 전대협이 평양축전 참가를 둘러싼 협상이 가지는 다각적인 의미에 관해 고찰해보려 한다.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라는 사건은 시기상으로 오래 지나지 않았기에 관련 정부 기록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축전 문제에 관한 정부와 전대협의 협상이 논의단계로 그친 까닭에 구체적인 자료로 남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건을 직접 겪은 사람들이 생존해있어 구술 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는 1989년 당시 전대협 중앙정책위원회 및 축전준비위원회 등으로 활동했던 다섯 명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필자가 면담한 인물은 전대협 축전준비위원회 위원장 전문환, 축전준비위원회 사무국장 박승복, 전대협 2기 부의장·의장대행 정명수, 또한 중앙정책위원회에서 간부로 일했던 A 씨, 전대협 산하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 서총련) 선전국장 김종원이다. 이들의 구술을 참고하여 평양축전 참가 협상의 전개 과정과 의의를 구체적으로 밝혀 보고자 한다. 다만, 30여 년 이상 지난 사건이므로 인터뷰 대상자들의 기억이 희미할 수 있다는 점을 극복하고자 구술 자료와 당시 『한겨레』의 보도 내용을 교차 분석하였다.

필자는 논문을 통해 평양축전을 둘러싼 정부와 학생 간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두 주체 중 정부 측의 입장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첫 번째로 평양축전 관련 정부 공개 자료를 찾을 수 없었고, 두 번째로는 평양축전과 관련하여 증언할 수 있는 정부 인사와 접촉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후일의 연구과제로 남겨두는 것을 택하고, 본 논문에서는 정부 측 입장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신문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I. 평양축전 개최에 대한 전대협과 한국 정부의 대응

1. 북한의 평양축전 유치와 전대협 초청

북한은 1985년 7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12차 세계청년학생축전 당시부터 차기 축전 유치를 계획하였다. 1987년 2월 6일부터 8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국제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축전 유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 축전은 1989년 7월 1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며, 북한 지도부는 본격적으로 축전 개최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북한이 평양축전을 유치하게 된 이유는 당시 남북한 사이에 진행되던 체제경쟁 때문이었다. 1981년 9월 30일 서독의 바덴바덴에서 열린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1988년도 서울올림픽 개최가 확정되고, 뒤이어 11월 26일 아시아경기연맹 총회에서 1986년 아시안게임의 개최지까지 서울로 확정되었다. 북한은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 서울올림픽 개최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난하며 개최를 저지하고자 했다.¹³⁾ 이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남과 북은 1985년부터 3년간 4차례의 회담을 거치며 올림픽 공동주최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결국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되었고, 북한은 1988년 1월 12일 올림픽 불참을 선언했다.¹⁴⁾

북한은 국제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남북 체제경쟁의 측면에서 8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올림픽에 대한 대응책으로 평양축전을 유치하고자 했다. 평양축전은 북한이 국제무대에서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내부 체제결속과 사회주의 우월성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나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다. 북한은 해외 대사관에 공문을 보내 교통비와

13) 허정필, 「북한의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 논의 참여 요인 분석 — 1988년·2032년 올림픽 사례를 중심으로 —」, 『북한학연구』 제17권 제2호,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21, 52쪽

14) 최진환, 「88 서울올림픽 남북 공동주최 논쟁에 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24권 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21, 42쪽; 「북한, 서울올림픽 불참 선언」, 『한겨레』, 1988.09.04.

숙식비, 체류비 등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평양축전에 청년학생 대표단을 보낼 것을 요청하는 등 외교전에 집중하였다.¹⁵⁾

북한은 평양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내부적으로 축전을 국가 역점 사업으로 삼아 제반 시설 구축에 총력을 기울였다. 축전 준비과정에서 평양에는 광복거리와 하신거리, 경흥거리 등 새로운 거리가 조성되었고, 길이 6km, 너비 100m짜리의 넓은 도로들과 25,000여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¹⁶⁾ 또한, 평양축전 참가자들을 위한 숙박시설과 문화시설들이 건설되었고, 종합경기장 1개와 실내체육관 9개를 갖춘 안골체육촌과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라도 경기장 등의 체육시설이 만들어졌다.¹⁷⁾

한편 북한은 축전 준비를 위해 국가 자원을 총동원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988년 5월 10일 김일성은 평양에서 동독의 사회주의 통일당 정치국원 귄터 샤보브스키와 만나 대화를 나눴다. 여기서 김일성은 당과 국가 전체가 1989년 평양에서 열리는 축전 행사 건설계획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축전 준비를 위해 자본이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어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¹⁸⁾

평양축전의 유치와 준비과정은 분명 남북한 체제경쟁의 측면에서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선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었고, 이후 북한 경제에 위기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평양축전이라는 행사가 이렇게 단편적인 속성만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세계청년학생축전은 본래 세계 각국의 청년학생들이 모여 반제·반전의 구호 속에서 단결하여 친선과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어져 온 공산권 국가의 국제적 행사이다. 특히 평양축전은 세계청년학생

15) 김윤희, 앞의 논문, 2022, 230쪽

16) 이세영,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전시장인 된 평양의 명암」, 김종엽 외, 『한국현대 생활문화사 : 1980년대 — 스포츠공화국과 양념통닭』, 창비, 2016, 218쪽

17) 김철우,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 『실천문학』 통권 13호, 실천문학사, 1989, 387쪽

18) Minutes of the Meeting between Kim Il Sung, Secretary General of the Korean Workers Party, and Comrade Günter Schabowski in Pyongyang on 10 May 1988,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Digital Archive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21671>)

축전이 시작된 이래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권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북한 역사상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북한에 찾아온 행사인 동시에 전 세계 177개 국가에서 무려 22,000여 명의 청년학생 대표가 참가하여 세계청년학생축전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의 참여를 이끌어낸 성대한 국제적 행사였다.¹⁹⁾ 중국은 축전을 위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200여 명 규모의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했으며, 미국에서도 지금까지의 북한 방문 인원 중 가장 많은 90명의 참가단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²⁰⁾

평양축전 개최를 앞두고 북한의 조선준비위원회 산하 조선학생위원회는 한국 적십자사를 통해 남한의 전대협 앞으로 평양축전에 초청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1988년 12월 23일 오전 손성필 북한적십자회 위원장은 김상협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준비위와 조선학생위원회에서는 남한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에 보내는 편지를 한국적십자사를 통해 해당 단체에 전달해줄 것을 희망한다며 오는 26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이 편지를 받아갈 것을 요청했다.²¹⁾

1988년 12월 26일 『동아일보』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 장 김창룡은 전대협 의장 앞으로 편지를 보내 내년 7월 1일부터 열리는 세계학생축전에 한국의 청년학생들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축전 초청 문제와 관련한 실무문제의 협의를 위해 다음 해인 1989년 3월 초 남북 학생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이 편지에서 조선학생위원회는 남북 학생회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는데, 판문점에서 각각 9~11명으로 구성되는 남북한의 대표단이 만나 평양축전 참가 문제를 협의하자는 것이었다.²²⁾ 이처럼 평양축전을 통해 다시 한번 남북한 학생교류라는 문제가 다시 쟁점화되었다.

19) 정근식·김윤애, 앞의 논문, 2017, 86쪽

20) 「평양축전 8일일정 막을라」, 『한겨레』, 1989.07.02.

21) 「청년학생祝典초청장 北韓,全大協에 보내」, 『동아일보』, 1988.12.23.

22) 「北韓「朝學委」서 全大協에편지 3月初 판문점學生회담을제의」, 『동아일보』, 1988.12.26.

2. 민주화 이후 대학생 통일운동의 전개와 평양축전 참가 문제

전대협이 평양축전에 참가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서술하기 위해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학생운동의 맥락을 살펴보아야 한다. 1988년 3월 29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김종기와 유재석은 유세 도중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에게 드리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여 학원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이들은 해당 서한에서 ‘민족화해를 위한 남북한 청년학생 국토종단 순례대행진’과 ‘민족대단결을 위한 남북한 청년학생 체육대회’를 제안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실무회담을 6월 10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²³⁾ 실무회담 개최일인 6월 10일은 1987년 6월항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계기가 된 6월 10일을 상징하는 것이었다.²⁴⁾

김종기와 유재석 후보의 학생교류 및 회담 제안에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는 1988년 4월 4일 ‘6·10 남북 학생회담 제의’ 동의서를 편지로 보내 오면서 긍정적으로 답했다. 학생들은 회담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열망으로 여러 차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²⁵⁾ 당시 대학생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²⁶⁾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이는 1960년대 4월혁명 이후 급물살을 탄 학생 통일운동에서 사용한 구호라는 점에서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²⁷⁾

학생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회담 전날인 1988년 6월 9일 경찰력을

23) 통일노력60년발간위원회,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 통일노력 60년』, 통일부, 2005, 183쪽

24) 민경우, 앞의 책, 2006, 122쪽

25) 5월 14일 고려대학교에서 대학생 2만여 명이 모여 ‘6·10 남북 청년학생 실무회담 성사 및 공동 올림픽 개최를 위한 범시민학생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6월 3일에는 고려대, 한국외대, 경희대 등 서충련 소속 학생 3천여 명이 경희대 노천극장에 모여 ‘6·10 남북 청년 학생회담 성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남북학생 회담 성취 다짐 서충련 3천여명 경희대서』, 『한겨레』, 1988.06.04.

26) 「『統一論』 大衆연계 試圖」, 『경향신문』, 1988.06.04.

27) 정근식·김운애, 앞의 논문, 2017, 94쪽

동원해 학생들을 물리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강력하게 저지하였고 학생과 경찰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다.²⁸⁾ 결국 6·10학생회담 개최는 실패로 돌아갔으나 학생들은 포기하지 않고 8월 15일 오전 10시에 판문점에서 남북 학생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6·10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8·15회담의 성사를 원천 봉쇄하는 방법을 택했고 두 번째 학생회담 제안 또한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

학생회담의 실제 개최 여부와는 상관없이 곧 남북 학생회담은 전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이후 김증기와 유재석은 비록 학생회장 선거에서 낙마하였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파격적인 행보는 통일운동이 대중화되고, 학생운동의 주된 의제에 민주화와 더불어 통일이 함께 자리매김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두 차례의 학생회담 개최가 좌절된 이후, 대학생 통일운동의 열기는 평양축전 참가를 두고 다시 한번 타올랐다. 학생들의 평양축전 참가 문제를 서술하기에 앞서, 북한의 평양축전 개최 소식이 국내에 가장 먼저 보도된 것은 축전 유치가 확정되고 이틀이 지난 1987년 2월 10일이었다.²⁹⁾ 국내 언론 중 경향신문이 소련 타스통신을 통해 소식을 접하고 처음으로 보도했으며, 이는 2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린 세계청년학생 축전준비위원회에서 평양이 차기 개최지로 결정되었다는 간략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평양 시내 재개발 공사 진행과 능라도 수영장 건설, 그리고 국제통신센터 건설 소식 등 북한의 평양축전 준비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국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³⁰⁾

한국의 대학생들은 언론을 통해 평양축전 개최 소식을 접하고, 북한의 공식 초청이 있기 전부터 축전 참가 준비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당시 학생들은 평양 축전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북한에서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전 세계적

28) 「‘판문점출정’ 원천봉쇄로 좌절」, 『한겨레』, 1988.06.11.

29) 「13회 세계청년祝典 89년 平壤에서 개최」, 『경향신문』, 1989.02.10.

30) 국내 여러 언론은 북한의 평양축전 준비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平壤 시내 재개발 공사에 학생 총동원」, 『조선일보』, 1987.03.07.; 「89년 「세계청년축전」대비 綾羅島에 수영장 건설」, 『조선일보』, 1987.04.02.; 「平壤에 국제通信센터 건설」, 『경향신문』, 1987.11.05.

인 행사가 열린다면, 당연히 우리도 가야 한다는 정서를 갖고있었다.³¹⁾ 1988년 11월 15일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 장진성이 교내 후보정책토론회에서 평양축전에 참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³²⁾ 조선대의 발표 이후, 중앙대에서도 운동권 단일후보인 신기정이 축전 참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후보 이귀례, 서강대의 전문환 등은 축전 참가를 공약으로 내세워 압도적인 표 차이로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 이처럼 각 대학의 총학생회 입후보자들이 축전 참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학생들이 이를 지지하면서 대학가에서 축전 참가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었다.³³⁾

이러한 상황에서 1988년 12월 26일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가 전대협을 평양축전에 공식으로 초청했다. 초청장의 내용에서 눈에 띄는 점은, 북한이 당시 한국 대학가에 확산되고 있는 축전 참가에 대한 분위기를 이미 접하고 초청장을 보냈다는 것이다.

우리는 최근 그대들이 평양축전에 참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시대와 력사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확고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를 열렬히 지지 환영한다. 우리는 래년 7월 초 평양에서 열리게 되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반제련대성, 평화와 친선을 지향하며 외세의 간섭이 없이 나라의 통일을 갈망하는 남녘의 애국적 청년학생들을 초청한다는 것을 귀단체에 정중히 알리는 바이다.³⁴⁾

북한에서 보낸 초청장의 내용을 보면 북한이 최근 한국의 대학생들이 축전 참

31) 전문환, 「민주화운동 맥락에서의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과 시민사회의 대응」,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심포지움 『북한의 사회변동을 이해하는 하나의 인식: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연구』 자료집, 2017, 44쪽

32) 「북한 청년학생축전 참가」, 『한겨레』, 1988.11.17.

33) 「평양축전 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전대협소식』 제 4호, 1989.01.31.; 「‘평양 학생 축전’ 참가 대학가 쟁점 부상 5개교 선거공약…확산 조짐」, 『한겨레』, 1988.11.20.

34)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대협 초대 편지」,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조선준비위원회 조선학생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오픈아카이브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839117>)

가에 대한 움직임에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지지하고 환영하는 의미로서 전대협을 초청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공식초청에 대하여 전대협을 비롯한 남한 대학생들의 반응은 당연히 매우 긍정적이었다. 12월 28일 오전 당시 전대협 의장대행직을 맡고 있던 정명수는 북한 학생들의 제의를 긍정적으로 수락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에 대한 지지성명을 곧 발표하고 내주 중으로 북한 쪽에 답신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³⁵⁾

뒤에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1989년 1월 17일 노태우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평양축전 참가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학생들은 축전 참가에 대해 희망을 품고 본격적으로 축전 참가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전대협 의장대행 정명수는 1989년 1월 19일 오전 10시 국토통일원을 방문하여 당시 통일원 교육홍보실장이었던 정석홍을 만나 세계청년학생축전 관련 자료의 전면 공개와 북한의 전대협 초청에 대한 답신 전달을 요청했다. 정명수는 여기서 당시 KBS에서 방영한 모스크바청년학생축전 프로그램이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정치행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편집했다고 항의했다. 이에 정석홍은 축전 관련한 프로그램을 전면 방영하도록 노력하고, 전대협에 비디오 테이프를 제공할 것이라고 답변했다.³⁶⁾ 아울러 정석홍은 전대협의 축전 참가 의사를 밝히는 답신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 조선학생위원회에 전달하고, 평양축전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 제공을 함께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1989년 1월 20일 오전, 전대협 의장대행 정명수는 평양축전 초청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고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 앞으로 보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답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너무나 오랫동안 분단된 조국에 살아 무엇보다도 평화와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우리로서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

35) 「청년학생축전 초청 전대협서 수락키로」, 『한겨레』, 1988. 12.29.

36) 「전대협, 오늘 평양축전 참가 답신 전달 통일원에 관련자료 협조요청」, 『한겨레』, 1989.01.20.

통일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을 확신하며 그대들의 참가초청을 흔쾌히 수락한다는 뜻을 전합니다. (중략)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대해서 우리 청년학생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과거에 열린 축전, 평양축전의 세부적 준비사항 등에 대해 소상히 알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전대협은 2월 중으로 제2기 전대협의 임기가 종료되고 제3기 전대협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전참가를 위한 실무회담, 이를 위한 대표단 구성에 관해서는 제3기 전대협에서 구체적 시기와 장소, 방법 등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³⁷⁾

전대협 의장대행 정명수의 이름으로 된 이 답신은 평양축전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그리고 조국통일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을 확신하며 축전 참가 초청을 흔쾌히 수락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또한, 축전 참가를 위한 실무회담 및 대표단 구성에 관해서 오는 2월 출범하는 제3기 전대협에서 구체적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을 결정해 알려주겠다고 밝히고 평양축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 측이 축전 관련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북한의 평양축전 초청 이후 축전 참가에 대한 정부 관계자들의 긍정적 언사가 더해지면서 다시 한번 남북 학생이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학생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전대협을 주축으로 각 대학교에서는 축전 참가 준비에 열을 올렸다. 앞서 1988년 말 전대협 3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축전 준비를 본격화하기 위해 축전준비위원회를 조직할 것이 합의되었다. 이에 1989년 2월 중순 당시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 전문환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대협 축전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축전 준비를 위한 별도 조직화 작업에 나섰다. 축전준비위는 독자적인 회의구조와 활동을 통해 평양축전 참가를 준비하고, 이를 전대협

37)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 수락' -1989년 01월 20일 전대협」,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통일기록관
(http://tongil-i.net/bbs/board.php?bo_table=archive&wr_id=17&page=136)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³⁸⁾

3. 축전 참가에 대한 정부의 초기 반응

1988년 2월 출범한 노태우 정권은 탈냉전이라는 급속한 세계사적 변화와 실질적 민주화 실현이라는 과제를 눈앞에 두고 새로운 정치적 기로에 놓였다. 1980년대 후반은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취임하여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중국에서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세계적인 탈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다. 북방정책의 기본 골자는 중국·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공산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이익의 증진과 남북한 교류·협력관계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었다.³⁹⁾ 이는 당시 한국 외교 노선에 있어 커다란 방향 전환을 의미했다.

당시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은 북방외교로 얻은 성과가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북방외교와 대북정책을 효과적으로 병행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1988년 7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7 특별선언』을 통해 구체화 되었는데, 6개 항의 대북정책 및 사회주의권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으며 그중 1항에서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 동포 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할 것을 밝혔다.

1988년 12월 북한이 평양축전에 전대협을 초청하고 그다음 해 3월에 학생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이흥구 통일원장관과 노태우 대통령은 평양축전 참가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흥구 장관은 1989년 1월 6일

38) 전문환, 앞의 논문, 2017, 47쪽

39) 전재성, 「노태우 행정부의 북방정책 결정요인과 이후의 북방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북방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27쪽

안병영 연세대 교수와 나는 대답에서 북한이 평양축전에 전대협을 공식 초청한 것과 관련하여 평양축전이 정치성 축전이라는 성격의 문제가 있으나 우리 학생들의 참가를 정부가 나서서 막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⁴⁰⁾ 이에 안병영 교수가 어떤 특정 이념을 띤 학생단체라도 방문이 가능한 것인지 묻자, 이 장관은 특정의 이념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인 여행의 자유가 제한받아서는 안 되며 북한도 이 같은 여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할 우리의 땅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그는 지금 정부는 북한과 교류할수록 좋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이 북한을 여행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1989년 1월 17일에 노태우 대통령도 평양축전에 남한 학생들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7월에 평양에서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우리 학생들을 보낼 것인지 묻자 노태우 대통령은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

평양 청년학생축전 문제는 여러분들 다 분석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소위 반제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전위의 역할을 하는 집회라는 성격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간에 어떤 형태든 어떤 분야든 교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과 정책에 따라서 문교부에서 이 학생교류 방침을 지금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든 교류 성사의 기회로 활용할 것입니다.⁴¹⁾

이처럼 노태우 정부는 평양축전이라는 행사의 성격을 인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와 분야에서든 남북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축전 참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북한과의 교류 성사

40) 「李滄一 北韓의 學生축전 全大協초청 政府서 참가 막지않을 것」, 『동아일보』, 1989.01.07.: 「李洪九 통일원장관—安秉永 교수 특별 대답 "통일은 長征…평화定着이 先決"」, 『동아일보』, 1989.01.09.

41) 「노태우 대통령 1989년 연두 기자회견 연설문」, 1989.01.17.,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의 기회로 활용할 생각이 있음을 밝혔다.

1988년 두 차례에 걸친 대학생들의 학생회담 제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고려했을 때, 1989년에 들어와 정부가 발표한 입장은 매우 예외적이었다. 정부가 대학생들의 평양축전 참가에 대하여 사실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정부는 평양축전에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선전의 성격을 띠는 정치적인 행사에 전대협의 공식명칭으로 참가할 경우 사회주의 단체로 공인되고, 이것이 정국 불안 요인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대협이라는 명칭을 피하여 한시적인 학생대표단, 혹은 참관인단을 파견하거나 축전 행사 중에 이루어지는 친선경기에 선수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알려졌다.⁴²⁾ 정부는 가급적 남북 학생교류 차원에서 평양축전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기본방침을 세워놓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남북관계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장기적인 해결과제로 파악해 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정부가 학생들이 평양축전에 참가하는 문제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는 1988년에 있었던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라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979년 올림픽 유치 구상 초기 단계에서 올림픽 유치 논의를 위한 관계 장관 회의가 개최되었고, 회의 참석자들은 올림픽 개최의 이유로 '국민총화'와 '대공산권 교류 및 대북한 우위 홍보'를 이야기했다. 또한 문교부가 국무회의에 제출한 『제24회 올림픽대회 한국유치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올림픽 유치목적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과 국력 과시, 한국 체육의 국제적 지위 향상, 스포츠를 통한 세계 각국 간 우호 증진, 공산권 및 비동맹 국가와의 외교관계 수립 여건 조성 등이 언급되었다.⁴³⁾ 이처럼 정부는 서울올림픽의 유치 단계부터 국제관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공산권과의 외교관계를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

서울올림픽은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 동안 160개국에서

42) 「정부, '청년학생축전' 실질참가 모색」, 『한겨레』, 1989.01.11.

43) 서울특별시 엮음,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백서 :Seoul 1988』, 1990, 280쪽

13,626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특히 12년 만에 동서 각국이 한자리에 모인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10월 3일 발표한 서울올림픽 폐막 기념사에서 “서울올림픽 대회는 모든 인종과 종교, 이념과 체제의 벽을 뛰어넘어 화합과 전진의 인류의 이상을 가장 참되게 구현한 대회로 빛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히며 서울올림픽 개최가 가진 의미에 대한 소견을 전했다.⁴⁴⁾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서 온 자신감과 올림픽을 통한 국제화는 해외여행 전면적 자유화라는 조치를 이끌어냈다. 외무부의 1988년 4월 2일 자 「해외여행자유화확대방안」 확정발표에 따라 정부는 1989년 1월 1일 자로 해외여행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결정했다.⁴⁵⁾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임수경의 방북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88 서울올림픽에는 소련을 비롯하여 동구권 국가들이 다수 참가하면서 한국은 그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이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주요한 디딤돌이 되었다.⁴⁶⁾ 한국은 1989년 2월 1일 헝가리와 수교를 맺는 성과를 이뤄냈는데, 이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국제적인 위신을 세우는 데 성공한 경험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집권하였다는 정치적 자신감과 확연하게 벌어진 남북한 사이의 경제력 격차에서 야기된 경제적 자신감 또한 정부가 남북교류 문제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했다.⁴⁷⁾

변화한 국내외적 배경 속에서 정부는 남북 학생교류 제의와 학생들의 축전 참가 문제에 이전과는 달리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당시 학생들은 1988년 학생회담 개최 시도에 대한 정부의 반응을 고려했을 때, 이번 축전 참가 또

44) 「서울올림픽 폐막에 즈음하여 국민께 드리는 감사말씀」, 1988.10.03.,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45) 「海外여행 완전自由化」, 『매일경제』, 1988.04.02.

46) 통일노력60년발간위원회, 앞의 책, 2005, 160쪽

47) 이우영, 「임수경사건과 남북관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심포지움 『북한의 사회변동을 이해하는 하나의 인식: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연구』 자료집, 2017, 120쪽

한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정부가 축전 참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자 이는 대학가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전대협은 기본 기조는 대중적, 합법적인 방법으로 축전 참가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당시 전대협 간부들 중 일부는 직접 선거를 통해 수립된 노태우 정부를 어느 정도 절차적 합법성을 지닌 정부로 인식하고 있었다.⁴⁸⁾ 이에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그들과 협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정부의 입장에 환영을 표하며 축전 참가 문제에 있어 정부와 협의하는 것을 일단 시도해 보기로 했다.⁴⁹⁾

48) “노태우 정부 자체를 생각하면 실제로 학생들도 많이 희생당하기도 했고 범민주 계열 쪽에서 보면 용납이 안 되는 정부이지만 여기는 직접 선거로 구성이 되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위해서 한다면 협력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서 정부가 마련한 공개적인 방법에 대한 적극적으로 수용한 거예요.”, 김종원 구술(면담자: 정선화), 2023년 4월 11일

49) 전문환, 앞의 논문, 2017, 48쪽

II. 한국 정부와 전대협의 축전 참가 협상 시도와 결렬

1. 남북학생교류추진위원회 발족과 대화 시도

1989년 초 정부와 전대협 사이의 초기 협상은 축전 참가 주체 문제와 참가 과정의 주도권을 두고 표류하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남북 학생교류와 축전 참가 문제를 추진하기 위한 공식 기구를 구성하였다. 1989년 1월 12일 정원식 문교부장관은 남북 학생교류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대학스포츠위원회 등 교육관련 단체와 전대협 등의 학생단체들이 포함되는 민간차원의 협의기구인 '남북학생교류추진협의회'(가칭)를 이달 안에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⁵⁰⁾ 해당 기구의 주요 협의 내용은 남북 학생 조국 순례 대행진 및 남북 학생 친선체육대회 교환개최 문제와 오는 7월 평양에서 열리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등에 대한 것이었다. 이처럼 정부는 남북 민간교류와 관련된 기구를 직접 구성함으로써 한국 대학생들의 축전 참가 문제에 전향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정부가 직접 관여하고 주도권을 행사하고자 했다.

정부가 남북 학생교류 문제를 담당하는 공식 기구를 구성한 것에 대하여 전대협 측은 전대협이 축전 참가 문제를 주도적으로 결정한다는 조건 하에 참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전대협 의장대행 정명수는 1989년 1월 13일 오후에 충남대학교에서 진행된 임시의장단회의에서 축전 참가 문제는 전대협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할 것이며 민간협의기구는 결정권을 갖는 것이 아닌 자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⁵¹⁾ 아울러 축전 초청에 대한 답신은 독자적으로 작성하되 남북 연락과 참가 절차 등 실무적인 문제는 정부 측과 협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50) 「남북학생교류 민간협의기구 이달안 발족 '세계청년학생축전' 등 각종행사 참가논의」, 『한겨레』, 1989.1.13.

51) 위의 기사, 『한겨레』, 1989.1.13.

다.52) 이는 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은 열어두되 북한으로부터 직접 축전에 초청받은 전대협이 참가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었다.

1989년 1월 27일 오전 각계인사 11명으로 구성된 남북교수·학생교류추진협의회 자문위원회가 문교부 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53)

[표 1] 남북교수·학생교류추진협의회 자문위원회 명단

이름	소속
서돈각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조완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윤형섭	대한교육연합회 회장
장충식	대학스포츠위원회 위원장
김문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이지관	동국대학교 총장
변형운	서울대학교 교수
지학순	주교
문인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양호민	정치평론가
전봉초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장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는 서돈각 학술원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교수·학생교류추진협의회가 정식 발족되었다. 이 협의회는 자문위원회, 교수 9명·학생대표 6명으로 구성될 남북학생교류추진위원회와 학자·교수 등으로 구성될 남북교수·학생교류추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중 남북학생교류추진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평양축전 참가 문제 전반을 다루는 것으로, 이에 대한 기본 업무와 자문 및 지도를 자문위원회가 맡게 되었다.54)

52) 「『平壤축전』政府도 학생도 딜레마」, 『경향신문』, 1989.01.16.

53) 「남북 교수 학생교류 추진協 各界·학생 대표등으로 구성」, 『동아일보』, 1989.01.27.

54) 「『남북교수·학생 교류협』 발족」, 『한겨레』, 1989.01.28.

문교부는 1989년 1월 31일 오후 1차 남북학생교류추진위원회를 소집해 첫모임을 가지려 했으나, 학생대표 6명 중 전대협과 전국민족운동대학생총연합의 대표가 참석을 거부하고, 나머지 4개의 단체(남북통일 전국학생총연합(이하 통학련), 청소년적십자단(RCY), 4H학생회 등)⁵⁵⁾만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난관에 부딪혔다.⁵⁶⁾

당시 전대협이 교류추진위에 불참한 이유는 여러 측면이 있었다. 먼저 당시 정부에서 조직한 교류추진위라는 기구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전대협의 독자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⁵⁷⁾ 당시 전대협 간부들은 교류추진위는 정부가 만든 어용적인 조직이므로 신뢰할 수 없으며, 무작정 참석한다면 오히려 주도권을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당시 1차 교류추진위가 열린 시기는 대학생들의 방학 중으로, 전대협 내에서도 2기에서 3기로 집행부가 이전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확실하게 구성되지 못했다는 문제도 존재하고 있었다.

또 다른 문제는 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연락 전달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전대협 간부들은 연락 수단의 한계로 학생들은 교류추진위로부터 제대로 위원회 개최에 대한 소식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다.⁵⁸⁾ 위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전대협은 추진위에 불참하게 되었다.

결국 학생대표가 불참한 상태에서, 1차 교류추진위는 1989년 1월 31일 예정

55) 참가 의사를 밝힌 네 개의 단체 중 나머지 하나의 학생단체명은 기사에서 밝히고 있지 않다.

56) 「표류하는 남북 교수·학생 교류」, 『한겨레』, 1989.02.05.

57) “남북학생교류추진위원회는 정부에서 만들어지고 약간 어용적인 조직 형태로 만들거라는 게 있고 전대협은 상당히 학생대표는 우리가, 공식적인 다른 모든 학생연합의 우리 대표인데 우리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죠.”, A 구술(면담자: 정선화), 2023년 3월 2일; “당시는 교추위에 무작정 참석하는 것이 정부 주도하에 끌려가거나 또는 협상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고 판단함. 당시 방학 중이어서 개학 후 상황판단을 하려 했음.”, 전문환 서면 인터뷰, 2023년 3월 10일; “1.2차 회의에 불참한 것은 이 시기 전대협 2기와 3기 집행부가 이전하는 기간이었고, 실무진들이 명확하게 구성이 안 되었다. 그리고 당시 노태우 정권에 대한 신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태였다.”, 박승복 서면 인터뷰, 2023년 4월 2일

58) “연대사업국에서 계속 움직여서 접촉을 시도했었는데 아마 전달이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당시 통지받을 수 있는 건 전화하고 팩스밖에 없는데, 학생들한테는 팩스도 안 줬었어요.”, 김중원 구술(면담자: 정선화), 2023년 4월 11일

대로 문교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단국대학교의 정용석 교수를 선출하고 평양축전 참가 문제, 남북대학생 국토순례대행진 추진 문제, 남북대학생 친선 체육 경기 교환개최 문제, 기타 남북교류 관련 사항 등을 사업내용으로 확정하고 이 중 축전 참가 문제를 우선으로 다룰 것을 결정하였다.⁵⁹⁾ 또한,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의 경우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전대협의 대표가 참석하는 것이 좋지만 불참하더라도 독자적으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⁶⁰⁾ 아울러 내달 2월 11일에 진행될 2차 회의에서 참가 여부와 방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전대협은 1989년 2월 1일, 문교부와 대한적십자사에게 정부 쪽에서 구성한 자문위원회와 추진위원회는 전대협과 전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재야, 학생, 종교, 언론 등 각계각층의 자문을 얻어 세계청년학생축전 전대협 준비위원회 고문단을 구성할 것과 전국민주교수협의회와 각 대학 평교수협의회에 위촉해 교수고문단을 구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⁶¹⁾ 아울러 전대협의 축전 참가 답신을 즉각 북한 측에 전달할 것을 촉구하였다.

평양축전 참가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풀리지 않던 협상은 정부 측의 입장 변화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교류추진위는 1989년 2월 11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차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위원회는 평양축전에 전대협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대표단을 참가시키는 데 합의하고 전대협이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에 보내는 대북서신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⁶²⁾ 아울러 전대협 학생대표 5명을 위촉하여 이달 말 이들을 포함한 3차 위원회를 열고 남북 학생교류를 위한 대표단 구성, 축전 참가 추진 절차, 경비 조달 등의 실무문제를 협의할 것을 밝혔다. 뒤이어 교류추진위 정용석 위원

59) 「南北 학생交流推委 4개事業 확정」, 『경향신문』, 1989.02.01.

60) 「“평양축전 참가여부·절차 전대협 불참편 독자결정”」, 『한겨레』, 1989.02.01.

61) 「남북학생 교류위 인정못해」, 『한겨레』, 1989.02.02.

62) 「‘평양축전’ 전대협 중심 참가」, 『한겨레』, 1989.02.12.

장은 2월 24일 판문점을 통해 전대협이 1월 20일 대한적십자사에 접수한 답신을 북한 측에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의 축전 참가에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다.

교류추진위의 전향적인 입장에 대해 전대협은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전대협은 평양축전 참가에 있어 교통편과 서신 왕래 등의 실무문제는 교류추진위와 긴밀하게 협조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축전에 참가하는 학생대표단이 전대협 중심으로 구성됨에 따라 축전의 참가내용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은 여전히 고수하였다.

정부는 평양축전을 앞두고 1989년에 들어와 대학생들의 축전 참가 문제를 다루기 위해 남북학생교류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전대협이 포함된 6명의 학생대표를 구성하여 이들과 축전 문제를 논의하고자 했다. 그러나 전대협은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은 주체로서, 전대협을 중심으로 축전 참가 대표단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위원회 참가를 거부하였다. 정부와 전대협은 의견 차이를 갖고 대립하였으나, 2차 위원회에서 전대협 중심의 대표단을 구성할 것을 발표하고 타협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협상의 가능성은 일단 여전히 열려 있게 되었다.

2. 공안정국과 협상의 정체

평양축전 참가 문제는 국내 정치 상황 변동과 정부와 전대협 사이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난관에 봉착했다. 축전 개최를 3개월가량 앞둔 1989년 3월 말부터 개인의 방북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남북교류의 분위기는 얼어붙기 시작했다. 3월 25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하 전민련)의 상임고문 문익환 목사가 재일동포 평론가 정경모, 한일합작회사 경영인 유원호와 함께 도쿄와 베이징을 경유하여 평양 공항에 도착했다. 문익환 목사 일행의 방북은 1989년 1월 1일 김일성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제안하면서 남한

의 각 정당 총재와 김수환 추기경, 백기완과 함께 문익환 목사를 초청한 것에 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⁶³⁾

문익환 목사 일행의 방북에 이어 거취가 불분명했던 소설가 황석영 또한 개인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 중인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⁶⁴⁾ 문익환 일행과 황석영은 1989년 3월 27일 김일성을 만나 오찬을 나누었고, 같은 날 문익환이 북한의 24개 정당·사회단체연합대회에 참석했다는 내용이 북한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다.⁶⁵⁾

문익환의 방북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각 정당에서는 회의를 열어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정당은 문 목사의 평양행을 ‘월북’이라고 규정하였고, 정석모 의원은 문 목사의 월북에 대한 비난도 크나 정부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분노를 드러내며, 강력한 대응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⁶⁶⁾

평민당 총재단 회의에서는 문 목사의 방북 의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정부와의 사전협의를 없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⁶⁷⁾ 민주당은 문 목사의 방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부가 7·7선언 이후 남북교류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규탄하며 정부의 통일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⁶⁸⁾ 공화당도 이번 기회에 정부가 남북교류를 비롯한 통일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국토통일원은 1989년 4월 21일 문익환 입북 관련 보고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외면한 것이며, 정부의 권위를 훼손시킨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문 목사의 방북이 우리 국민들의 방북에 대한 관념에 혼란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급진세력이 또다시 이와 유사한 밀입북을 추진할

63) 「金日成, 盧대통령 초청」, 『매일경제』, 1989.01.04.

64) 「소설가 황석영씨도 평양 체류중인듯」, 『한겨레』, 1989.03.28.

65) 「문목사, 김일성주석 면담」, 『한겨레』, 1989.03.29.

66) 「國論에 혼란政局냉각 우려」, 『경향신문』, 1989.03.27.

67) 위의 기사, 『경향신문』, 1989.03.27.

68) 「문목사 방북 파문…각당·재야 움직임」, 『한겨레』, 1989.03.28.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책 방향으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통일정책수행의 추진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북한 방문 등은 정부와의 협의 및 정부의 지도하에 추진되도록 할 것을 제시하였다.⁶⁹⁾

당시 문익환 목사와 황석영 작가의 방북에 대한 전대협의 반응은 우호적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전대협 축전준비위원장이었던 전문환은 1988년은 통일운동의 열기가 매우 뜨거웠기 때문에 그 여세를 몰아 개인적인 방북 또한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였다고 증언했다.⁷⁰⁾

그러나 한편으로 당시 전대협 측은 두 개인의 방북과 전대협의 축전 참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당시 전대협 중앙정책위원회 정책위원장이었던 구술자 A는 전대협의 축전 참가는 문익환 목사나 황석영 작가와 같은 개인의 방북과는 다른 차원이며, 남북교류에 있어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고 증언했다.⁷¹⁾ 또한, 서총련 선전국장 김종원은 두 사람의 방북은 비합법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전대협의 축전 참가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계획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증언했다.

(두 사람은) 비합법적으로 간거고 우리는 합법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대단히 용기 있다고 생각했고, 지지하는 입장을 드렸던 건 사실이죠. 근데 그게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는 거에 잘못하면 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만 했었어요.⁷²⁾

69) 통일부 교류협력국 총괄과, 「문익환씨 입북관련 보고」, 1989.04.21., 국가기록원 (<http://uci.or.kr/G500:1310377-02012019369766>)

70) 전문환 서면 인터뷰, 2023년 3월 10일

71) “문 목사님이나 황석영씨는 그야말로 개인적 결단이에요. 조직의 대표가 아니에요. 임수경 대표 같은 경우는 학생 조직으로서 교류의 물꼬를 트고, 남북의 통일이나 어떤 교류 문제들을 정말 남측의 대표와 북측의 대표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걸 만들자는 그런거고. 그래서 정말 팡팡 열어 있는 상황들을 깨뜨리는 물꼬를 만들자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어떤 조직의 대표가 참가하는 건 남북 모두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죠.”, A 구술(면담자: 정선화), 2023년 3월 2일

72) 김종원 구술(면담자: 정선화), 2023년 4월 11일

당시 전대협은 기본적으로 문익환 목사와 황석영 작가의 방북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으나, 이는 전대협의 평양축전 참가를 통한 방북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다. 주체에서도 개인과 조직의 대표라는 차이가 있었으며, 방법에서도 두 사람은 비합법적인 방북을 시행했으나, 전대협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가는 것이므로 다르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두 사람의 방북이 가져온 여파가 전대협의 합법적인 축전 참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한다.

문익환 목사와 황석영 작가의 방북 사건 이후 정부는 당국의 허가 없이 진행되는 남북교류 시도를 봉쇄하고자 했다. 1989년 4월 21일 이흥구 통일원장관 주재로 경제기획원, 외무부, 상공부 등 15개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여 제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남북교류협력 기본지침'과 운영세칙을 논의했다. 회의를 통해 남북한 상호방문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원칙을 세웠다.⁷³⁾

뒤이어 1989년 5월 3일에 부산 동의대 사건⁷⁴⁾과 5월 10일 조선대 이철규 변사사건⁷⁵⁾이 차례로 발생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혼란이 지속되었다. 대학가와 야당들은 이철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⁷⁶⁾

정부는 동의대 사건을 계기로 '좌경 운동권 세력'에 대한 강경한 대처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5월 3일 부산 동의대학교 참사와 관련하여

73) 「북한방문 통일원장관 승인받아야」, 『한겨레』, 1989.04.22.

74) 1989년 5월 1일 부산 동의대학교에서 학생들이 학내 입시부정 진상규명을 위한 가두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공포탄을 발사하였다. 이에 흥분한 학생들이 5월 2일 공포탄 발포에 대한 항의 시위 과정에서 사복경찰 5명을 학교 안으로 납치하여 감금하였다. 다음 날인 5월 3일 오전 경찰은 감금된 경찰 5명을 구출하기 위해 진압 작전에 나섰고, 학생들이 이에 맞서기 위해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경찰 6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났다.

75) 1989년 5월 10일 조선대 교지 『민주조선』의 편집위원장 이철규가 광주시 북구 청옥동 제4수원지 상류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다. 이철규는 3월 말 발간 배포된 교지에 6.25를 인민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하는 북한 측에 동조하는 글을 게재하여 국가보안법 혐의로 광주·전남지역 공안합동수사부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光州 수원지 上流서 變屍로」, 『동아일보』, 1989.05.11.

76) 「朝鮮大生 변사 時局에 파문」, 『동아일보』, 1989.05.11.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화염병을 제조하고 폭력혁명을 획책하는 거점이나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그것이 학원이나 노동현장이거나 어디, 누구이든 간에 끝까지 추적하여 법에 따라 처벌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⁷⁷⁾

정부의 강경한 탄압 국면이 이어지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학생운동 세력은 통일 문제와 평양축전 참가에 대한 투쟁을 이어가는 것이 맞는가를 두고 갈등에 놓였다. 일부 학생들은 평양축전 이슈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선대 이철규 사건을 계기로 광주와 5공비리 라는 내부 문제를 보다 강력하게 운동 의제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⁷⁸⁾ 그러나 이 문제에 가장 당사자성을 띠고 있었던 당시 전대협의 광주/전남지역 지부인 광주 전남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남대협)에서 ‘5월에서 통일로’라는 슬로건을 통해 정치적 입장을 정리하였다.⁷⁹⁾ 광주 학살과 이철규 열사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통일운동을 포기한다면 이를 이루어낼 세력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평양축전이라는 세계 각국의 청년학생들의 축제에 참석해서 한국 대학생들의 통일 의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당위성이 당시 학생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었다.⁸⁰⁾ 이로써 공안정국에도 불구하고 축전 참가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 결의되었다.

각 대학의 학생들은 1989년 5월 무렵 진행되는 대학 축제의 주제를 ‘통일’로 잡고 조국 통일논의의 확산과 축전 참가 열기를 고조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정부의 남북교류 창구 일원화 방침과 더불어, 정부와 전대협이 축전 참가 형식에 관한 문제를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도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만들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총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축전 참가 논의를 위해 학생들이 북한과 직접 접촉하는 문제, 두 번째는 축전 행사 중의 정치행사에 대한

77) 「부산 동의대학교 참사와 관련하여 국민께 드리는 말씀」, 1989.05.03.,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78) 「줄다리기 반년 ‘평양축전’참가 좌절 문턱에」, 『한겨레』, 1989.06.11.

79) 김종원 구술(면담자: 정선화), 2023년 4월 11일

80) 전문환 서면 인터뷰, 2023년 3월 10일

전대협이 참여 여부, 마지막으로 축전 참가 대상에 전대협 이외의 각종 청년단체를 포함하는 문제였다.⁸¹⁾

먼저 북한과의 직접 접촉 문제와 관련해, 1989년 2월 14일 교류추진위는 평양축전 주관 단체인 북한의 조선준비위원회에 서신을 보내 축전 참가에 대한 실무회담을 제안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통해 추진위의 발족 취지를 알리고 전대협 쪽의 답신을 전달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실무적인 접촉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다.⁸²⁾ 그러나 전대협은 2월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 측에 평양축전 참가에 대한 실무회담을 3월 16일 오전 11시 판문점에서 열 것을 제안함으로써 북한 측과 직접 접촉하여 평양축전 참가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고 결정하고자 했다.⁸³⁾

전대협 임시의장 임종석은 1989년 3월 2일 오전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해 3월 16일 판문점에서 평양축전 남북 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내용의 제안서를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⁸⁴⁾ 뒤이어 전대협은 3월 8일 한양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임시의장 임종석과 축전준비위원회 위원장 전문환을 비롯하여 20여 명의 학생과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대협은 남북실무회담에 대한 서한을 즉각 전달할 것을 촉구한다는 뜻을 밝혔다.⁸⁵⁾ 그러나 정부 측이 남북 학생의 직접 교섭을 반대하면서 이 서한은 북측에 전달되지 않았다. 대신 교류추진위는 3월 13일 북한의 조선준비위원회와 조선학생위원회 앞으로 2차 서신을 보냈다. 서신의 내용은 각기 학생대표 3인과 위원회 대표 4인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3월 말과 4월 초 사이 판문점 남한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남북 학생교류 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었다.⁸⁶⁾

교류추진위의 남북 실무회담 제안에 대하여, 북한 측의 조선준비위원회와 조

81) 앞의 기사, 『한겨레』, 1989.06.11.

82) 「'평양축전' 참가 실무회담 남북교류위 북한에 제안」, 『한겨레』, 1989.02.15.

83) 「평양축전회담, 내달 16일 열자」, 『한겨레』, 1989.02.24.

84) 「전대협 학생축전 제안 적십자사에 전달 요청」, 『한겨레』, 1989.03.03.

85) 「전대협, 축전관련 기자회견」, 『漢大新聞』, 1989.03.09.

86) 「"엇갈리는 視角" 「平壤축전」 참가」, 『경향신문』, 1989.03.27.

선학생위원회 위원장은 서신을 통해 “우리와 전대협 사이의 회담이 성사되지 못한다면 귀 단체와의 회담도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밝혔다.⁸⁷⁾ 북측의 서신에 대해 교류추진위의 정용석 위원장은 북측이 학생들과의 직접 대화를 고집하는 교류추진위는 정부와 학생 사이의 조정역을 포기할 것을 선언했다.

평양축전 참가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 개최는 정부의 직접 접촉 반대 원칙과 북측과 전대협의 제안이 충돌하면서 정체되었다. 결국 전대협은 1989년 3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4월 중순 이후로 실무회담을 연기할 것을 밝혔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4월 19일, 전대협은 한양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 한번 남북 청년학생 실무회담을 오는 28일 오후 3시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에 공개 제의했다.⁸⁸⁾ 실무회담에서는 전대협의 축전 참가 방식, 남북 청년학생의 학술문화 예술행사 개최 문제,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청년학생공동선언 채택 문제 등이 논의될 계획이었다.

공안정국으로 분위기가 냉각되면서 정부 측은 더욱 견고하게 남북 학생의 직접 대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1989년 4월 26일 정원식 문교부장관은 전대협이 북한 쪽과 실무회담을 진행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남북한의 교류와 접촉은 정부의 승인 아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의 허가 없이 시행된 자의적인 접촉은 조치 대상이므로 무모한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다.⁸⁹⁾

전대협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89년 4월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평양축전 실무회담 강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전대협 축전준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축전 참가 문제에 관해 현 정부나 교류추진위와의 대화에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언제든지 응할 용의가 있으며, 축전 참가 방식 등에 대해 텔레비전 토론회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⁹⁰⁾

87) 위의 기사, 『경향신문』, 1989.03.27.

88) 「‘평양축전’ 실무회담 28일 열자」, 『한겨레』, 1989.04.20.

89) 「“남북한 학생 접촉 정부승인 받도록” 정원식 문교부장관」, 『한겨레』, 1989.04.27.

90) 「‘평양축전’ 실무회담 강행 경찰 원천봉쇄…충돌예상」, 『한겨레』, 1989.04.28.

1989년 4월 28일 당일, 전대협은 예정대로 남북 실무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11시 55분 홍익대를 출발하여 판문점으로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학생들의 평양축전 실무회담 개최를 강경하게 탄압하기 위한 대비를 마친 상태였다. 경찰이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난지도 검문소에서 학생들을 검거하기 위해 미리 대기 중이었고, 이들에 의해 학생 19명 모두 연행되었다.⁹¹⁾ 이윽고 5월 1일 전대협 실무단장 김상국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평양축전 실무회담은 진행되지 못했다.

두 번째로 축전 정치행사 참여 문제를 두고 정부와 전대협은 갈등을 일으켰다. 정부가 초기부터 학생들의 평양축전 참가를 고심한 이유는 축전이 정치행사를 주류로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따라서 축전 행사 참가 문제는 정부와의 논의 하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전대협은 대표단의 판문점 통과 문제와 교통편, 안전 문제 등 실무적 차원에서 정부의 협력을 구할 수는 있으나 축전 각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전대협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와 전대협 간 의견이 충돌했다.⁹²⁾

마지막으로 전대협과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이하 전청협)의 축전 공동 참가 선언 문제가 불거졌다. 1989년 3월 11일 전대협이 주관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를 위한 공청회'가 서강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공청회에는 전대협 축전준비위원장 전문환을 비롯해 정용석 교류추진위 위원장, 평민당 의원이었던 이찬구 국회 통일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오 전민련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이범영 전청협 대표 그리고 학생들이 모여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⁹³⁾ 통일원과 문교부 측은 교류추진위에 모든 문제를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공청회에 불참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각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 평양축전 참가 방법을 둘러싼 입

91) 「판문점행 전대협대표 19명 연행」, 『한겨레』, 1989.04.29.

92) 위의 기사, 『한겨레』, 1989.06.11.

93) 「平壤청년축전 參加엔 「한목 소리」」, 『동아일보』, 1989.03.13.

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중 전청협은 재야 17개 청년단체가 모여 만들어진 조직으로, 이날 전청협의 대표가 기초발제를 통해 평양축전에 학생대표와 함께 참가할 것을 발표했다.

전청협의 축전 참가 발표에 대해 전대협은 축전 참가는 전대협 중심이 되겠지만 본래 행사의 목적이 청년학생 축전이기 때문에 전청협과 함께 참가할 계획이라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한 정용석 교류추진위 위원장 또한 교류추진위가 전대협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대협이 축전 참가에 있어 전청협을 받아들이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에 공청회로부터 일주일 이 지난 1989년 3월 18일 전청협 의장과 전대협 축전준비위원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평양축전에 단일 참가단을 구성해 참가할 것을 선언했다. 그러나 정국 변화로 정부가 재야단체에 대한 강경 대응을 경고하면서 전청협의 축전 참가 또한 제한되는 방향으로 입장이 변화하였다.

1989년 5월 20일 북한의 조선준비위원회가 오는 6월 5일 남한의 전대협, 전청협, 교류추진위, 북한의 사회민주주의노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조선준비위원회, 조선학생위원회의 6자가 모여 평양축전 예비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⁹⁴⁾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갔다. 5월 26일 오전 11시 교류추진위 위원장실에서 정용석 위원장 등 교수 3명과 전대협 소속 남녀 대학생 3명(강희설 서총련 축전준비위원장 외 2명)이 모여 90여 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 학생들은 북측이 제안한 6자회담의 실현을 위해 이에 앞서 전대협, 전청협, 추진위 간의 3자회담 실시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추진위 명칭에도 있듯, 재야청년운동단체는 축전 참가 권한 밖에 있다며 거부 의사를 강조하였다.⁹⁵⁾

정부 측과 전대협 사이 계속된 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미 꼬여버린 매듭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1989년 6월 6일 정원식 문교부장관이 전대협의 평양축전 참가를 불허한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문교부 관

94) 「평양축전 예비회담 북한 내달개최 제의」, 『한겨레』, 1989.05.21.

95) 「對話(대화)의 벽」, 『경향신문』, 1989.05.27.

계자는 현재 약 30여 개 단체가 북한과의 직접 접촉을 주장하고 있어⁹⁶⁾ 전대협
의 방북을 허가한다면 혼란이 예상되며, 3월에 있었던 문 목사의 방북 사건의
여파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⁹⁷⁾ 또한, 정원식 장
관은 전대협이 교류추진위를 통한 평양축전 참가를 추진하는 정부의 방침을 무
시하고 북한과의 단독회담을 고집함으로써, 사회 혼란을 일으키려는 북한의 정
치선전 공세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⁹⁸⁾ 이렇게 6개월가량의 축전 참가를
위한 노력은 좌절되는 듯했다.

전대협은 정원식 문교부장관의 축전 불허에 관한 담화 다음 날인 1989년 6월
7일,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축전 참가는 남북 자주 교류의 원칙에 따
라 민족적 대단결과 동질성을 찾아 나가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대학생들의 축전 참가는 문교부나 검찰이 허용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⁹⁹⁾ 전
대협은 정부의 불허 방침에 개의치 않고, 축전 참가에 대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결의했다. 전대협은 앞서 6월 1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평양축전 실무문제 논의
를 위한 남북한 6자회담을 6월 10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가질 것을 제의했었다. 이에 9일 오후 연세대에서 전대협 학생 2만여 명이 집결
하여 「전대협 축전참가대표단 1차 발족식 및 북한대표단 방문 환영대회」를 갖고
축전참가 대표인단 일부를 구성하고 발족하기로 했다.¹⁰⁰⁾ 또한, 평양축전을 위
한 ‘실무회담 참가 북녘학우 환영대회’를 갖고 밤샘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남북한 6자회담이 무산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가
두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96) 당시 평양축전을 앞두고 대한YMCA연맹,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KSCF), 기독교청년협의회(EYC) 등
국내 기독교 단체들과 한겨레신문과 MBC, 외신기자 등 취재목적의 기자들, 조류생태계 조사 목
적의 학자들 등 총 40여 명이 평양축전을 위해 방북 신청을 했다고 보도되었다. 「YMCA·기독교학
생단체 등도 평양축전 참가승인 요청」, 『한겨레』, 1989.06.17.; 「平壤축전 취재·참관 訪北신청 모
두 40명」, 『매일경제』, 1989.06.20.

97) 「“平陽축전 못간다” 공식 發表」, 『동아일보』, 1989.06.06.

98) 「전대협 평양축전 참가 불허」, 『한겨레』, 1989.06.07.

99) 「평양축전 둘러싸고 격돌 조짐」, 『한겨레』, 1989.06.08.

100) 「오늘 축전 남북실무회담 강행, 경찰 원천봉쇄방침… 9일 대표단 발족도」, 『서강학보』,
1989.06.10.

마침내 1989년 6월 10일이 되어 전대협 남부지구 축전준비위원회 부위원장 김주현을 단장으로 한 북쪽 대표 환영단 40명이 오전 9시 연세대를 출발하여 판문점으로 향했으나 문산역에서 경찰에 연행되었다.¹⁰¹⁾ 또한, 평양축전 남북한 6자 실무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북한 대표단 등 일행 65명이 오전 10시경 판문점 중립국 감시위원회 회의실에 도착하여 판문점 통과를 요구하며 2시간 동안 설전을 벌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낮 12시경 돌아갔다.

전대협은 평양축전 남북한 6자 실무회담이 정부 당국의 봉쇄로 좌절되자 연세대 민주광장에서 '6.10 남북 실무회담 방해 규탄 및 평양축전 참가를 위한 백만 학도 결의대회'를 가졌다.¹⁰²⁾ 약 6,000여 명의 학생들이 거리 시위에 나서자 경찰은 다연발 최루탄을 발사하여 무력 진압을 통해 학생들을 강제해산 시켰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 중 11명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12명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¹⁰³⁾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얼어붙은 분위기는 전대협이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전환되었다. 1989년 6월 16일 오후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권유로 이홍구 통일원장관과 전대협 축전준비위 연대사업국장 정소앙을 포함한 학생대표 2명이 평민당사에서 만나 축전 참가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눴다.

당시 평민당이 이홍구 장관과 학생들 사이 대화를 주선하게 된 상황은 이전부터 학생들이 야당 및 재야단체 등과 만나 자신들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해줄 것을 요청해왔던 데서 비롯되었다. 평민당사 회동 전날인 1989년 6월 15일, 전대협 축전준비위원회 소속 학생 2명은 김대중 총재 자택으로 직접 찾아가 전대협의 협조적인 입장을 설명하고, 통일원장관과의 면담을 주선해줄 것을 요청했다.¹⁰⁴⁾ 서총련 선전국장 김종원은 불허 방침 발표 이후, 정부에 대한 불신에도 대화의 장소가 평민당사였으므로 이 회동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¹⁰⁵⁾

101) 「6월항쟁 2돌...전국 10여곳 시위」, 『한겨레』, 1989.06.11.

102) 위의 기사, 『한겨레』, 1989.06.11.

103) 「축전 참가요구 거리시위 대학생 11명 구속」, 『한겨레』, 1989.06.13.

104) 「長官의 인격과 양심믿어」, 『경향신문』, 1989.06.17.

이흥구 장관과의 만남에서, 정소앙은 전대협 쪽의 평양축전 독자 참가 후퇴 방침을 전달했다. 이는 자신들이 참가 주체가 되어 평양으로 가되, 정부가 지정하는 다른 청년학생 단체와의 공동참여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전대협의 입장은 전대협 중심의 학생대표단 참가라는 초기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을 의미했다.

전대협 측 입장에 대하여, 이흥구 장관은 정부의 기본입장이 평양축전 참가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축전 참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6월 17일 교류추진위 정용석 위원장과 학생들 사이의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통일원에 돌아온 뒤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를 공식 협상창구로 인정하지 않는 한 학생들의 축전 참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¹⁰⁶⁾ 학생들의 축전 참가는 북한 측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이었다.

한편 평민당과 민주당은 전대협의 협조적인 태도를 환영하며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¹⁰⁷⁾ 평민당사 회동이 이루어진 다음 날인, 1989년 6월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평민당 총재는 학생들의 유연한 자세를 높게 사며,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재철 민주당 부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여 전대협 측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대폭 수용한 것은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함으로 높이 평가하며, 정부는 이와 같은 전대협의 남북 학생교류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축전 참가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전했다.

전대협은 축전 참가를 위해 계속해서 정부에 협조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1989년 6월 17일 오전 10시 동국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당국이 실질적인 축전 참가를 보장한다면 교류추진위에 전대협 대표 5명을 참가시켜 참

105) “당시에는 야당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게 또 공식적으로 교류추진위에서 하자고 했으면 안 갔을 거예요. 평민당에서 했기 때문에 갔던게 기억나요. 안전하다고 봤기 때문에.”, 김종원 구술(면담자: 정선화), 2023년 4월 11일

106) 「정부창구 북한서 인정 안 할 땐 축전참가 불가능」, 『한겨레』, 1989.06.17.

107) 「“전대협 제의 정부서 수용해야” 평민·민주」, 『한겨레』, 1989.06.18.

가대표단 구성, 절차 및 참가 후 활동 문제 등에 대해 신축적으로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정부 쪽에서 우려하고 있는 남북 공동선언문 발표와 정치성 행사에 참가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단순 참관단체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는 의견을 언급했다.¹⁰⁸⁾

축전 개최가 목전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전대협이 타협점을 내놓자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의도에 대해 의심하였다. 경향신문 기사는 전대협이 축전 참가와 관련해 여론을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돌려놓음으로써 약화된 입지를 만회하고, 향후 이어질 정부에 대한 투쟁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¹⁰⁹⁾ 그러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전대협 측은 끝까지 합법적 축전 참가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온 것임을 밝혔다.¹¹⁰⁾

1989년 6월 17일 오전 11시 45분경 전대협 축전준비위원회 연대사업국장 정소앙이 교류추진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정용석 위원장에게 축전 참가 문제에 있어서 정부 쪽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겠다는 전대협의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이날 50분에 걸친 회담에서 전대협 측은 교류추진위뿐만 아니라 정부 쪽과도 유연하게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교류추진위에 전대협 대표 5명을 보내는 등 축전 참가 문제에 나서고 정부 쪽 실무책임자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¹¹¹⁾ 정용석 위원장은 전대협의 변화된 입장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를 문건으로 정리하여 오는 19일 전달해주면 긍정적으로 검토한 뒤 정부 쪽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대협 측이 변화한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한 이후, 한겨레신문에서는 이를 주도한 전대협 축전준비위원장 전문환을 만나 일문일답을 나눴다. 대화에서 전문환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 재개라 생각하여 만남을 성사시키고자 1989년 6

108) 「교류추진위 통해 평양축전참가 전대협 대표단 구성도 당국에 일임」, 『한겨레』, 1989.06.17.

109) 「『平祝』불참 名分싸움」, 『경향신문』, 1989.06.20.

110) “이런 만남은 왜 했냐면 마지막 하나라도, 실오라기 하나라도 희망이 있으면 계속 교섭을 해야 되니까요.”, 전문환 구술(면담자: 정선화), 2023년 2월 16일

111) 「평양축전 참가 새 국면」, 『한겨레』, 1989.06.18.

월 16일의 평민당 화합이 이루어진 것이라 말했다.¹¹²⁾ 이에 앞서 6월 15일 전대협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공식 입장 중 첫 번째는 축전 참가를 위한 보장은 정부 당국인 통일원과 논의하고 참가가 허용될 경우 모든 실무문제를 교류추진위와 협의한다는 것, 두 번째는 정당과 통일원, 교류추진위 및 전대협이 참가하는 회의에서 참가 문제를 논의하고 특히 정치성 행사의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전문환은 전대협의 제안에 대해서 정부 또한 고심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으며, 평민당사에서의 회동 당시 이흥구 장관은 참가를 분명히 보장했고, 사전임을 전제로 우리 쪽 내부의 논의에는 문제가 없고 참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고 이야기했음을 전했다.

전대협의 축전 참가를 위한 대화 시도는 계속 이어졌다. 1989년 6월 19일 오전 전대협 축전준비위원회 연대사업국장 정소양 등 전대협 대표 2명은 교류추진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앞서 정용석 교류추진위원장이 요구한 대로, 축전 참가의사를 문서로 전달하며 정부 쪽과의 협의 방안을 논의했다.¹¹³⁾

정리하자면, 평양축전 참가를 둘러싼 정부와 전대협의 협상은 문익환 목사와 황석영 작가의 방북, 동의대 사건과 조선대 이철규 변사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정부의 탄압 국면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전대협 사이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로 인해 정체되었다. 그러던 중 1989년 6월 6일 문교부에서 불허 방침을 발표하면서 학생들의 축전 참가는 좌절되는 듯했다. 그러나 6월 16일 전대협이 타협적으로 입장을 전환했고, 지속적인 대화 시도에 이흥구 통일원장관과 정용석 교류추진위 위원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전대협 내부에서도 정부의 반응을 접하자 축전 참가에 대해 다시 희망을 품고 서둘러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¹¹⁴⁾ 그러나 당시 전대협 간부 A씨의 증언에 따르

112) 「'축전'준비위원장 전문환씨 일문일답」, 『한겨레』, 1989.06.18.

113) 「전대협대표, 추진위 방문」, 『한겨레』, 1989.06.20.

114) “진짜 다 가는 줄 알았어 그때. 정말 신기하게. 그래서 그러려면 서둘러야 하고, 어떻게 준비하지?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진짜 가는거 아냐? 부터 시작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축전준비위원회는 완전히 들떠있었어요. 갈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학생이 순진한거예요. 아무리 우리랑 대립각을 세우는 정부라도. 합법적인 틀을 통하겠다고 하고 있었고. 정부에서

면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공안정국과 문교부의 불허 담화 발표 등의 상황으로 인해 평양축전 참가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위기 또한 감돌고 있었다고 한다.¹¹⁵⁾ 그렇지만 열어 있는 남북관계의 국면을 깨뜨릴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정부와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능하다면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평양축전에 참가하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의견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처럼 평양축전을 열흘 앞두고 달라진 분위기 속 새로운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3. 정부의 축전 참가 불허 방침

전대협은 독자참가후퇴방침을 선언하면서 교류추진위 참석을 약속하고 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정용석 위원장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전대협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정부 측에 전달할 것을 약속하면서 축전 참가는 가능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돌연 정부가 대학생들의 축전 참가 불허 방침을 발표하면서 결국 정부와 전대협 사이 협상은 성사되지 못한 채 상황이 종결되었다.

1989년 6월 20일 오후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안기부장, 외무부·국방부·통일원·문화공보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생들의 평양축전 참가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최종방침이 논의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대협 등 학생들의 축전 참가와 언론사의 취재를 모두 허가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고 다음 날 열릴 예정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이러한 불허 방침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¹¹⁶⁾

1989년 6월 21일 이흥구 통일원장관 주재로 개최된 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

허락한 길로 우리가 간다면 그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축전준비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거는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거죠.”, 김종원 구술(면담자: 정선화), 2023년 4월 11일

115) A 구술(면담자: 정선화), 2023년 3월 2일

116) 「정부, 평양축전 참가·취재 불허」, 『한겨레』, 1989.06.21.

의회에서, 정부는 평양축전에 전대협을 비롯한 대학생 참가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최종결정했다. 평양축전 보도와 참관 목적으로 방북을 신청한 한겨레신문 등 언론 기자의 방북에 대해서도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남북역사학자회담과 같은 학술교류 목적의 방북은 허가하고, 이를 남북학술교류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¹¹⁷⁾

이흥구 통일원장관은 평양축전 참가 불허의 이유로 평양축전의 정치적 성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떠한 형태로든 참가 자체가 우리 체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일회성 교류라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으며, 북한이 평양축전을 공작적 차원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대협의 과격한 정치적 입장도 변화가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정부가 갑작스럽게 축전 참가를 불허한 것은 노태우 정부 내 관료들 사이 정치적 입장 차가 있었고, 공안정국의 분위기 속에서 결국 남북교류 문제를 두고 강경한 입장이 우세하여 내려진 결과로 보인다. 당시 정부 인사들의 입장 차는 2004년 진행된 노태우 정부 시기 관료 중 북방정책의 입안과 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세 사람을 신익희가 구술을 청취하여 분석한 연구를 보면 뚜렷하게 드러난다.¹¹⁸⁾ 이 연구에 인용된 구술에서 강경한 대북 입장을 고수했던 관료A는 북방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북한의 흡수통일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북한과 접촉하고 대북정책을 수행한 박철언 정무장관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진시킴으로써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입장이었다. 마지막으로 앞선 두 사람에 비해 중도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던 관료B는 대북정책에 있어 압박을 통한 대화 유도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당시 정부 내 관료들은 남북관계 개선과 축전 참가 문제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갖고 있었고, 진보적 학생운동 집단이라는 외부 세력과의 접촉에서 그 입장

117) 「'축전' 참가·취재 불허」, 『한겨레』, 1989.06.22.

118) 신육희, 「압박과 배제의 정치: 북방정책과 북핵 1차 위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집 1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7, 209쪽

이 충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축전 개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는 점도 갑작스러운 불허 방침 발표에 영향을 주었다.

정부가 축전 참가를 공식적으로 불허하였으나 전대협은 어떤 방식으로든 축전 참가에 대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1989년 6월 24일 오전 11시경 전대협 의장 임종석은 오스트리아 빈에 머물고 있는 축전준비위원회위원장 이찬영과 30여 분 동안 국제전화로 평양축전 참가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임종석은 지난해 6.10 대회 이후 평양축전 참가를 위해 노력했으며 마지막까지 참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만약 축전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남북 청년학생의 공동선언문 채택 등 통일을 위해 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달했다.¹¹⁹⁾

전대협이 ‘어떤 방식으로든’ 축전 참가에 대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은 곧바로 행동으로 드러났다. 전대협 의장 임종석은 1989년 6월 29일 오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외국어대 4학년 임수경을 전대협의 공식 대표로서 평양축전에 참가시키기 위해 일본을 거쳐 동베를린으로 보냈고, 곧 입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¹²⁰⁾

전대협은 만약 정부가 축전 참가를 불허할 상황에 대비하여 공식적인 참가가 어려워졌을 경우 대표를 보내기 위해 1989년 5월 말에서 6월 초부터 사전 준비를 시작했다.¹²¹⁾ 1988년에도 남북 학생이 만날 기회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1989년에는 꼭 성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이는 전대협 의장, 축전준비위원회 위원장, 축전준비위원회 정책실장, 그리고 중앙정책위원장 네 사람이 모여 대표 선발부터 교통편 등 절차까지 비밀리에 준비되었다. 이 중 대표를 선발하는

119) 「全大協 任鍾皙 의장 南北축대표와 通話」, 『동아일보』, 1989.06.24.

120) 「전대협'축전'대표 평양 파견」, 『한겨레』, 1989.06.30.

121)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냐 그런 논의가 혼재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5월 말, 6월 초부터 그러면 정부가 안 보내고 우리가 어떻게든 보내야 된다. 밀입국이라도 시켜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전문환 구술(면담자: 정선화), 2023년 2월 16일

과정은 주로 축전준비위원회 정책실장이 맡았고, 중앙정책위원장이 북측으로 보내는 루트 조사를 맡았다.¹²²⁾

전대협 산하 서충련 선전국장 김종원은 평양축전 참가 문제에 있어 전대협의 플랜A는 합법적 루트를 통해 학생대표단을 구성하여 많은 인원이 축전에 참가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고 노력하였으나 정부 측이 불허 방침을 발표하면서 전대협 대표가 단독으로 방북하는 플랜B가 가동된 것이라 증언했다.¹²³⁾ 이렇게 임수경은 홀로 북한에 가게 된 것이다.

전대협의 평양축전 참가는 당시 4월혁명 직후부터 이어져 온 대학생들의 통일과 남북 교류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전대협은 평양축전의 합법적 참가를 위해서 정부 인사와의 교섭에 임했다. 축전을 앞두고 정부가 축전 참가를 불허하자, 그동안 고수해왔던 축전 참가단 구성에서의 전대협의 대표성을 일부 내려놓는 타협적 입장으로서의 전환을 통해 끝까지 축전 참가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평양축전을 둘러싼 정부와 전대협의 협상에서 아쉬운 부분 또한 존재한다. 정부는 학생들의 평양축전 참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축전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식기구를 조직했다. 비록 학생들이 당시 정부와 정부가 만든 기구에 대해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학생 대표가 참석한 교류추진위가 한 차례도 개최되지 못했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전대협의 평양축전 참가 이후 정부의 학생운동권 탄압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후 1990년 3당 합당이라는 보수 정치로 귀결되면서 민주화 이행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았다.

축전 참가가 사회적 이슈였을 당시,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회장 장윤재 국제협력 부장은 “축전은 조국 통일운동을 대중운동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나 정부 측에 제도 하나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축전 참가가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해 모든 방면에 걸친 사전·사후 활동이 동반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다면 정부는

122) A 구술(면담자: 정선화), 2023년 3월 2일

123) 김종원 구술(면담자: 정선화), 2023년 4월 11일

학생운동을 대북 접촉의 한 도구로 이용하거나, 또는 좌경세력으로 매도하여 보수 대연합 실현의 호재로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했다.¹²⁴⁾ 이는 실제로 학생들의 축전 참가가 좌절된 이후의 상황을 이미 예측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124) 신준영, 「「전대협」의 평양행, 노정권의 속셈」, 『말』, 1989년 3월호, 29쪽

맺음말

임수경은 7일간의 평양축전 행사 참석을 마치고 1989년 8월 15일 정의사제 구현단 문규현 신부와 함께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기존의 계획은 7월 27일 정전협정일을 기념하여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밟고 넘어오는 것이었으나 정부의 반대에 맞닥뜨려 결국 8월 15일, 판문점을 통해 돌아오게 된다. 임수경은 입국과 동시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고,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으나 1992년 성탄절 특사로 특별가석방 되었다.

전대협 대표 임수경의 평양축전 참가는 남북한 양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북한은 평양축전 준비를 위해 국가 자원을 총동원하였고, 일각에서는 이것이 북한 경제 붕괴의 시발점이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임수경의 존재가 준 문화적 충격은 매우 컸다. 단발머리를 하고 청바지를 입은 여학생이 자유분방한 태도로 많은 이들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은 북한 학생들에게 큰 충격으로 각인되었고, 북한 주민들에게 평양축전과 임수경은 분리될 수 없는 집단적 기억으로 남았다.

결국 평양축전 개최는 북한 당국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주민들의 의식을 균열 시키고 북한 내부 체제결속에 위기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57년 모스크바 축전이 소련 사회에 미친 영향을 보았을 때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러시아인들은 자유롭게 사고하고 멋지게 옷을 입은 젊은이들을 보자, 사실상 하룻밤 새 외국인 혐오증과 비밀경찰 정보원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다. 축전의 많은 목격자들은 나중에 축전이 흐루쇼프의 비밀연설만큼이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볼 것이었다. 재즈 연주자 알렉세이 코즐로프는 “1957년의 축전이 소련 체제 붕괴의 시작이었다.”고 믿는다. “축전 이후 스탈린주의 사회의 해체 과정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중략)고 회고한다.¹²⁵⁾

블라디슬라프 M.주보크의 『실패한 제국』 2권을 보면, 많은 이들이 1957년에 개최된 모스크바 축전이 훗날 이루어진 소련 붕괴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평양축전이 북한 내부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볼 때, 시사점을 주는 사례로서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우리는 실현되지 못한 또 다른 차원의 역사적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만약 한국 정부와 전대협의 협상이 이루어져 임수경 대표 한 명이 아닌 수백명 규모의 학생대표단이 평양축전에 참가했다면 어땠을까? 그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파장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예컨대 남북 학생교류의 물꼬가 트이고 이로 말미암아 향후 남북관계가 비교적 쉽게 활로를 뚫었을 것이다. 또한, 임수경 한 명이 만들어낸 효과가 몇 배로 크게 작용하여 마치 1957년의 모스크바 축전이 소련 사회 해체에 영향을 미쳤듯, 북한 사회의 균열을 야기하고 탈냉전의 흐름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으로 향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1989년의 협상은 여러 희망적 가능성이 잠재된 획기적인 역사적 시도였다.

평양축전 참가를 둘러싼 정부와 전대협의 협상이 성사되었다면 이후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와 학생운동 세력의 관계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규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불허 방침으로 결국 임수경이 단독 방북하게 되었고 잠재되어 있던 가능성은 그저 하나의 상상으로 남게 되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획기적인 외교적 전환이었다. 노태우 정부는 1989년 2월 헝가리와의 수교에 이어 1992년 8월에는 중국과의 수교를 맺는 데 성공했다. 1989년 2월부터는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 개최되었다. 예비회담을 거쳐 1990년 9월 1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회담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1991년 12월에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성과를 이뤄냈다.¹²⁵⁾

125) 블라디슬라프 M.주보크, 『실패한 제국 2 : 냉전시대 소련의 역사』, 아카넷, 2016, 35쪽

126) 윤철기·구갑우, 「남북한 대화에서 남북한의 상호인식 변화 — 노태우 정부 시기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심으로 —」, 『북한학연구』 제9권 제1호, 2013, 16쪽

한편으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7·7선언을 통해 남북한 동포 간의 상호교류를 추진할 것을 밝혔고, 학생들의 평양축전 참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평양축전 참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진보적 학생운동 세력 간의 남남대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평양축전 참가에 관한 정부와 전대협 사이의 협상은 성사되지 못했고, 정부와 학생운동 세력 사이의 관계는 더욱 경색되었다. 남남대화의 사례로서 다른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었음에도 그 가능성이 닫혀버린 것이다. 이는 당시 노태우 정부 내 관료들의 대북 인식 차이에 따른 충돌과 한계를 보여준다.

1989년 평양축전을 둘러싸고 진행된 정부와 전대협 사이 협상은 매우 이례적이었으며, 비록 결렬되었으나 그 시도 자체만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진보적 학생 통일운동 세력은 한반도 통일과 남북교류를 중요한 사회 문제로 여겼고,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당선된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기조로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했다. 그리고 두 주체의 우호적 협력 속에서 평양축전 참가 협상이 시작될 수 있었다.

오늘날 여전히 분단 상태의 한반도에서 남북한 관계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은 사회적으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해방 이후, 학생들은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주체로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왔다. 오늘날에도 정치·사회적 문제 해결에 있어 미래 청년세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청년들은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렇기에 현시점에서 1989년 평양축전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정부와 전대협의 협상이 보여준 가능성은 현시점에서 남북한 민간교류와 남남대화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초석이 된다.

참고문헌

I. 자료

1. 한국자료

1) 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한겨레』
『말』, 『서강학보』, 『漢大新聞』

2)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소장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총괄과, 「문익환씨 입북관련 보고」, 1989.04.21., 국가기록원

「노태우 대통령 1989년 연두 기자회견 연설문」, 1989.01.17.,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부산 동의대학교 참사와 관련하여 국민께 드리는 말씀」, 1989.05.03.,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서울올림픽 폐막에 즈음하여 국민께 드리는 감사말씀」, 1988.10.03.,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3) 구술

김종원 구술(면담자: 정선화), 2023년 4월 11일

박승복 구술(면담자: 정선화), 2023년 2월 3일
박승복 서면 인터뷰, 2023년 4월 2일
전문환 구술(면담자: 정선화), 2023년 2월 16일
전문환 서면 인터뷰, 2023년 3월 10일
정명수 구술(면담자: 정선화), 2023년 3월 30일
A 구술(면담자: 정선화), 2023년 3월 2일

4) 기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대협 초대 편지」,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조선준비위원회 조선학생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오픈아카이브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 수락」 - 1989년 01월 20일 전대협,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통일기록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심포지움 『북한의 사회변동을 이해하는 하나의 인식: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연구』 자료집, 2017

2. 미국자료

Minutes of the Meeting between Kim Il Sung, Secretary General of the Korean Workers Party and Comrade Günter Schabowski in Pyongyang on 10 May 1988,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Digital Archive

II. 연구성과

1. 단행본

김종엽 외, 『한국현대 생활문화사 : 1980년대 — 스포츠공화국과 양념통닭』, 창비, 2016

블라디슬라프 M.주보크, 『실패한 제국 2 : 냉전시대 소련의 역사』, 아카넷, 2016

민경우, 『민경우가 쓴 통일운동사 — 1972-2005』, 통일뉴스, 2006

서울특별시 위음,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백서 :Seoul 1988』, 1990

통일노력60년발간위원회, 『하늘길 땅길 바닷길 열어 통일로 : 통일노력 60년』, 통일부, 2005

하용출 외, 『북방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홍석률, 『통일문제와 정치·사회적 갈등 : 1953~1961』,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2. 논문

김병원, 「평양축전을 통한 북한의 대중동원체제 활용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6집, 1990

김윤희, 「북한에서 ‘임수경 열광’과 도전받은 집단주의」, 『아세아연구』 65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22

김철우,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 『실천문학』 통권 13호, 실천문학사, 1989

박해남, 「서울올림픽과 1980년대의 사회정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8

손호철, 「남남갈등의 기원과 전개과정」,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신옥희, 「압박과 배제의 정치: 북방정책과 북핵 1차 위기」, 『한국정치외교사논총』29집 1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7

윤철기·구갑우, 「남북한 대화에서 남북한의 상호인식 변화 — 노태우 정부 시기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심으로 —」, 『북한학연구』 제9권 제1호, 2013

이윤식, 「글로벌시대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대북정책과 남남갈등을 중심으로」, 『世界地域研究論叢』 35집 3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17

조원일, 「눈물로 쓴 탈북민 手記 노동자 대학」, 『北韓』, 북한연구소, 2012

최진환, 「88 서울올림픽 남북 공동주최 논쟁에 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24권 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21

허정필, 「북한의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논의 참여 요인 분석 — 1988년·2032년 올림픽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17권 제2호,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21

ABSTRACT

The negotiation between Korean government and Jeondaehyup(National Council of University Student Representatives) on the 13th World Festival of Youth and Students

Sunhwa Jeong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negotiation process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Jeondaehyup on the participation in the 13th World Youth Festival held in Pyongyang in 1989. Lim Soo-kyung's visit to North Korea in the summer of 1989 is remembered by people as an incident that caused a lot of controversy in Korean society at the time. At that time, the process leading to the government's extreme suppression over the Pyongyang Festival, confrontation with students, and Lim Soo-kyung's visit to North Korea was not inevitable. Although it is not well known, negotia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Jeondaehyup took place over the participation in the 1989 Pyongyang

Festival. Previously, there have been proposals for inter-Korean student exchanges by college students, but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progressive student unification movement and the government have officially negotiated, which is a very unusual event.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Jeondaehyup on the the 13th World Youth Festival provide various implications for the view of Korean society after democratization. First of all, this case is an example of the nature of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s northern policy, and it allows us to evaluate how much willingness and political and ideological flexibility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 had in promoting civilian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econd, it presents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ogressive student unification movement forces, which have been in an extreme confrontation since the student unification movement began in earnest right after the April Revolution. Finally, it extends the meaning of the Pyongyang Festival from political events for anti-imperialism propaganda held in the process of system competi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o events that affected the crack in the North Korean regime at the same time as an unusual large-scale international event held by North Korea.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Jeondaehyup were an event that latent a new level of historical possibility. If the negotiations had been concluded and a 500-member student delegation participated in the Pyongyang festival, it would have had a very big impact o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beyond the Korean Peninsula. Although the

negotiations broke down, the attempt itself is significant. Today, the Korean Peninsula is still divided, and South and North Korea relations are repeatedly in place, and the issue of unification is becoming increasingly weak socially. In this situation,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Jeondaehyup in 1989 are an important cornerstone of how to solve the problems on nongovernmental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dialogue within South Korean society.